

금남로에서



신항락 이사·논설주간

이제 ‘지역차별’을 말하자

는 은어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나 ‘오유(오늘의 유머)’ 등에는 흥어가 곧 전라도란 뜻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갈수록 더하는 호남비하

심지어 일베는 게시공간에 5·18 당시 희생된 시인과 계엄군에 포박된 시민들을 ‘배달될 흉어 포장 완료’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와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나아가 이제는 전라도를 묶어 충북, 좌빨(좌익 빨갱이)이란 딱지를 붙이는데도 주저함이 없다. 사이버상에 퍼져 있는 전라도란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낙인’임에 분명하다. 국가기관사건인 국정원 직원의 댓글을 보면 더욱더 가관이다.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트위터 글을 보면 ‘호남을 호구로 보는 문제인과 안철수’, ‘문 후보는 확실히 종북’, ‘대선 후보 기호 1번 대한민국, 기호 2번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했더니 기호 2번 문 후보에게 90%의 지지를 보낸 전라도 사람들은 빠도 없는, 빨갱이들인가. ‘흉어 종자들,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구차하다. 지역 비하는 누가 뭐래도 정치의 산물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비롯된 호남 비하가 대선관을 달구면서 ‘민주당=호남 좌빨’로 전이시켜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동원하고, 국

군사이버사령부 직원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건 ‘막가자’는 짓이다. 지금, 전라도 사람들은 우울하다. 호남권 인구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 당하면서 영·호남이 이젠 ‘영·흥’이 될 판이다. 유권자 수도 지난 9월 말로 역전돼 호남정치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에 선 노골적으로 현재 30석인 호남의 국회의원 수를 인구와 비례해 25석인 충청도에 그만큼 더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남은 인구의 역외 유출도 모자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마저 발생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호남이 ‘아껴둔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일 뿐이다. 문제는 이게 위기의 전조라는 데 있다. 더 이상 지역감정은 없어

개인이 어떤 지역과 연결될 때 흔히 편견을 경합하게 된다. 전라북도 사람이 어둡고, 광주는, 목포사람은, 광양사람은 어둡고 하는 것은 종든, 나쁜 선입견일 뿐이다. 그러나 지역차별로 범위가 커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거기엔 부정적 이미지만 편견이 난 무하게 된다. 전라도를 상징해 보자. 적어도 1997년 12월 호남 출신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이든, 경상도에서든 사투리를 쓰는 게 두려움 그 자체였다. ‘전라도 X’이라는 편견이 자격지식을 키운 탓이다. 이 때까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호남사투리는 조폭과 악역의 말투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그 사투리가 귀에 익어지면서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편견은 비하로, 악의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대표적인 게 ‘흉어’의 등장이다. ‘흉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

은펜클럽



옥영석 농협중앙회·2005년 수상자

농가 소득안정, 정가수의매매·도매물류센터 활용을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이렇게 큰 이유 중 하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가격결정은 경매제도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 경매제도는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공정한 가격결정에 이바지해왔지만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는 경쟁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누구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려 들지 않으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배추 한 포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가 얼마든, 수요와 공급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니,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던 품목이 올해에는 생산량이 많아 폐기되고, 품목을 번갈아 가며 같이왔던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상하여 거래하는 방법(수의)으로 물량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정가수의매매’다.

구매자가 산지의 농업인과 출하조직에게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농업인들과 협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급처별 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아 안정적이며, 이미 2012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중 9%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998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농협이 도입한 ‘예약수의거래’ 방식과 맥이 닿아 있다. 농업인들은 적어도 생산원가를 보장받는 가격선에서 공급할 수 있고, 유통업체에서는 수급량에 의한 가격 추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이런 가격결정방식이 대체로 이를 수 있다면 적어도 수송비도 나오지 않아 밭에서 폐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감귤과 버섯을 중심으로 정가수의매매 우선 실시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과 공관장간 출하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MOU를 체결하고,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을 보급하는 등 정가수의매매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약수의거래방식’으로 농산물을 조달하는 안성농수산물유통센터를 시작으로 장성, 밀양, 횡성, 제주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전국의 하나마트는 물론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및 외식업체, 군부대학교 등에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들 권역별 물류센터는 단순히 농산물을 수집 분산하는 기능은 물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결정방식의 다양화는 기존에 도가 가지고 있던 가격변동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정가수의매매’를 잘 활용하고, 지역 농협과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도매물류센터 출하를 늘려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소록도, 오래된 풍경

고뇌와 온갖 고통, 인내, 의지가 담긴 두 인물화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상남’에 젖은 남성의 이마에서는 연두빛으로 이글거리는 몇 가닥 머리칼이 당장에라도 튀쳐나갈 것만 같았다. 뭉그러진 손으로 담배피는 다른 남성은 고흐를 떠오르게 했다. 그가 다시 뭉크를 생각나게 했다. 작가의 혼이 그대로 투영되었을 저 큰 그림들이라니, 나도 모르게 다시 한 번 작가를 바라보게 되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성은 어찌자고 저렇게 크고 강력한 그림을... 이튿날 다시 들었다.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교회가 한 점 희망처럼 귀퉁이에 흰빛으로 보이는 풍경화가 이국적이면서 평화로웠다. 나는 마침내 그림 값을 물었다. 그림 값 생각들을 하기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빨사, 이미 팔렸단다. 그러고 보니 꽤 많은 작품이 팔려나가 하트 스티커를 달고 있다. “이 큰 작품은 누가 사셨어요?” 나란히 걸린 두 인물화의 주인이 궁금했다. “어떤 사진작가가 두 점을 다 사셨어요, 개인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시겠다고...”

소록도에서 26년째 근무 중이라는 작가.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간호사인 그녀는 작품 연도를 쓰기가 어렵다 했다. 한 작품을 두고 너무 오래오래 그리기에, 특히 유화의 경우, 첫 스케치에서 마지막 붓을 놓기까지 그녀는 아주 여러 해가 걸리는 게 태반이라란다. 그렇게 발효의 시간을 거친 데서 감동이 오는 걸까, 어쩌면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소록도가 그녀 그림을 함께 완성시켜주는 지도 모른다. 그녀는 국전이나 각종 미술대전에서 시도해 보지 않는단다. 그림에는 결코 도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나는 내가 받은 감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졌다. 그녀는 이미 울긋불긋한 작가였다. 허명을 쫓지 않는, 그러기에 더 강한 정신력과 창작력을 필요로 하는 작가였다. 도록이 없어서 (50부만 만들었다가 다시 100부를 더 만들었는데도 일찍 바닥났단다. 기대하지 않고 그저 용기 내어 가진 첫 전시회였음을 알 것 같다.) 나는 아쉬움을 휴대전화로 나누고 나서려는데, 그녀가 다가왔다. “혹시 집으로 곧장 가시나요?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예쁜 한 화면 하나를 내게 건네준다. “드리고 싶어서요. 어차피 이 화면들 제가 다 키울 수도 없고, 제가 사람도 다 못 돌보고 있는데...” 얼떨결에 받았다.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작가란 그렇게 내어 주고 싶은 존재일까, 주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강건함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합해져서, 나는 낯숙 한 화면 하나를 받았다. 정작 고마워 해야 할 사람은 관객이 아닌가. 오랜 세월, 혼을 다해 그려낸 좋은 작품을 공짜로 감상하게 해주고 게다가 감동을 일으켜주는 작가에게. 휴대폰을 열어 그림을 들여다본다. 그녀가 혼자 20년 넘게 그리고 품어오며 어렵고 매진된 작품들을 들여다보면서 좋은 그림이란 뭘까를 생각한다. 이 가을, 가까운 동네의 전람회장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지금 나는 이 글을 쓴다. 뜻밖에 웅성깊은 작품들이 당신을 감동시킬지 모른다. “사람도 다 못 돌보고 있는데...” 이런 평범한 말이 지금 내 가슴에는 꽃으로 남아있다.



이연초 주부

남구문화청소년 수련원 일출 전시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들렸다. 소소한 전시회들이 자주 열려서 보통은 그냥 지나치는 편이었다. 어디에도 작가 약력이 보이지 않았다. 흘러넘 살피고도 나오려 했는데 웬걸, 그림에 마음을 뺐졌다. 눈이 먼 ‘하모니가 부는 노인’, 소독물에 ‘발 씻는 노인’, 곡물 등의 저장용 판자창고들이 즐비한 마을풍경, 일주일마다 국가에서 주는 부식(장기 저장하기 어려운 생물이 나 식물들)을 타느라 줄 서있는 장면..... 한 걸같이 삶의 깊이와 세월의 더께가 진하고도 생생했다.

마트 카트기 외부 유출 땀 사고 위험...관리 필요

집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카트를 종종 보게 된다. 그게 왜 사용처인 마트를 떠나 민가 근처로 내려와 있을까? 일부 쇼핑객들이 무분별하게 가지고 나온 것인데, 마트의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온 것도 부도덕한 행동이고 일종의 절도가 된다. 심지어 그걸 끌고 나온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굴러가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처에 맞는 공간을 떠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카트를 어떤 주부가 그냥 마트 밖으로 끌고 나올 경우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횡단보도를 건너 가게 마련이다. 결국 카트의 바퀴는 적잖게 망가지고 부서진 채 주렛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데 버려지게 된다. 이것의 바위가 이미 망가져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걸 모든 채, 혹은 부서졌거나 망가져 나 하나의 장난감으로 여긴 아이들이 그 카

트를 밀고 다니며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낼 위험이 크다. 즉 쇼핑물건을 싣는 짐칸에 아이들이 타고 그것을 밀고 다니다가 도로에서 차에 치일 위험이 크다. 또 다른 위험은 그렇게 울러타며 장난치다가 바퀴가 빠져 급정거하게 될 경우 카트가 전복되는 수도 있고,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치는 사례도 많다. 카트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마트의 카드 강화된 제재와 함께 소비자들의 상숙한 쇼핑물기가 적절히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입춘동

社說

중앙정부에 예측된 ‘말 뿐인’ 지방자치

어제 서울에서 행정안전부 추최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방자치 부활 헌법개정일(1987년 10월 29일)에 맞춰 제정된 첫 행사이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잔치상을 받고도 흥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들어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중앙정부에 예측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활 22년째를 맞이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중을 보더라도 국제 79%대 지방세 21%로, 8대 2의 비율이다. 반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세 비중은 50%대다. 자치단체에서 쓸 돈이 부족하다 보니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1.0%에서 올해 40.1%까지 급락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16.3%에 불과하다. 양 시·도 모두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각각 1000억원 안팎의 빚(지방채)을 내고 있다. 사

무척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다. 국가사무는 4만2316건, 지방사무는 1만1991건으로, 71.7대 28.3의 비율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앙정부 의존체 원 중심에서 자주재원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제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정부가 맡아야 할 기초연구 및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배분도 인구나 가구 등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사무 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 심의·평가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되면 결국 그 고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남 학교폭력서를 전국에서 가장 많디나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적발돼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이 84개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학교가 폭력의 온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경이 되 도록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해 적발돼 해체된 전국 학교폭력 서클 597개 중 전남지역에서만 84개의 서클이 신고돼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도 530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전남 다음으로 학교폭력 서클은 서울(83개)·경기(78개)·광주(62개)·전북(5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전남의 경우 지난 2008년 891명에서 2012년에는 1321명까지 48.2%나 급증했다. 하지만 드러난 수치가 실상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서클이 해체됐다고는 하지만 자치 성인 폭력조

직과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다 학교폭력도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다. 적어도 이쯤 되면 학교폭력을 교화화 선도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날로 진화하고, 똑똑스럽게 자라는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내놓은 대책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학교폭력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옹두사미가 되기 일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도 공허한 독백일 뿐 실현 가능성은 찾기 어려웠다. 제대로 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나서 폭력서클의 실체와 규모를 가능한 전수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위중한 병일수록 처방은 단순·명쾌하게 해야 한다. 드러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다.

無 等 鼓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먹먹할 지경이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런 무시와 슬픔을 감수해야 한다니. 김용하 전 국민연금재정추진위원장이 “나이가 들어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김 전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이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인생을 잘못 산 실패자’인 셈이다.

실패한 인생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인의 생각을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실패해 일어난 기력을 잃은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는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강원도 최전방에 근무하다가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 모 중위에 대해 “본인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에 따져보니 (이 중위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과외수당을 받기 위해 나왔다고 한다”며 “뭉클리를 할 입장인데 다른데 연연하다 보니 문제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논설주간 申博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주 소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